

등록번호	복지환경위원회-1884	담당자	전문위원	수 전문위원	부위원장	위원장	의장	결 재
등록일자	2022. 6. 13.	안병희	김수태	김희환	김영환	김기서	김재민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구분	대국민공개	협조자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충청남도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
활동 결과 보고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4조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에 의거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보고(제출)함

직 위	성 명	지역구	서 명
계	11명		
위원장	 김기서	부여1	
부위원장	 황영란	비례	
위원	 방한일	예산1	
위원	 안장헌	아산4	
위원	 양금봉	서천2	
위원	 오인환	논산1	
위원	 윤철상	천안5	
위원	 이선영	비례	
위원	 최훈	공주2	
위원	 한영신	천안2	
위원	 김한태	보령1	사적: 2022. 4. 30.

목 차

I. 총 평

1. 주요성과	1
2. 아쉬웠던 점	1
3. 향후과제	1

II. 구 성

1. 구성목적	2
2. 구성경위	3
3. 구성개요	3

III. 주요 활동

1. 활동결과 총괄	12
2. 분야별 활동내역	12
3. 세부 활동내용	15
1) 간담회 개최	15

2) 전체회의 개최	19
① 제1차 회의	19
② 제2차 회의	23
③ 제3차 회의	47
3) 현장방문 활동	76
4) 입법 활동	79
5) 도정질문	95
6) 언론기고 활동	101

1. 주요성과

□ 조례 2건 제정·시행

-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및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견인할 조례 2건 제정·시행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현 의원 대표발의)

□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도민 관심 환기

- 전체회의, 언론기고, 도정질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도민 공감대 형성 구심점 마련

2. 아쉬웠던 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활동 제약

- 도내 탄소 및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현장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활동 반경 제약

※소관 상임위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노후화력발전소 현장방문을 연계 실시함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사회·전문가 등 외부인과 함께 하는 대면 활동 부재로 활발한 의견 교환 및 협의 미진

3. 향후과제

□ 충남형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완성 및 실현을 위한 노력 필요

-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된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와 연계하여 충남형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질적 완성을 위해 충남도의회 및 충청남도 전 부서의 전사적 노력 필요

1. 구성 목적

- 현재 탄소중립은 글로벌 의제화 및 국가 최우선 정책 목표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충남도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는 도정 전반에 걸쳐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으며, 도의회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만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에,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매개로 하여 충남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추진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순연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행정의 기본적 기능을 밑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의회의 역할인 정책 방향 제시 및 우선순위 선정, 재정투자의 효율성 사전 검증 기능 등을 덧붙여, 이를 한데 모아 엮어내 우리도의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의회와 집행부 및 도민 참여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시대적 목표 완수를 통해 충남도의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견인코자 함.

2. 구성 경위

-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 의원)가 제안하여 2021년 9월 14일 충청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음. 2021년 10월 7일 충청남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명 위원(김한태·황영란 의원)을 추가 선임함. (총 11인)

3. 구성 개요

- 1) 명 칭 :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 2) 구성현황 : 11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2021. 10. 8.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함.

- 위 원 장 : 김기서(농수산해양위원회/부여1)
- 부위원장 : 황영란(복지환경위원회/비례)
- 위 원 : ※5)위원 명단 참고

- 3) 활동기간 : 2021. 9. 14. ~ 2022. 6. 30.
- 4) 소관 및 직무범위(제331회 임시회 의결)

-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및 방향 모색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발굴

-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공감대 형성

5)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지역구	비 고
계	11명		
위원장	 김기서	부여 1	
부위원장	 황영란	비례	
위원	 방한일	예산 1	
위원	 안장현	아산 4	
위원	 양금봉	서천 2	
위원	 오인환	논산 1	
위원	 윤철상	천안 5	
위원	 이선영	비례	
위원	 최훈	공주 2	
위원	 한영신	천안 2	
위원	 김한태	보령 1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1호
------	---------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기서, 오인환, 정병기
오인철, 김 연, 김은나
한영신, 지정근, 황영란
김영권, 정광섭 의원
(11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천적 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위 원 수 : 15인 이내

2. 제안이유

- 인류 문명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높아지면 사라질 위협에 놓여 있다는 각국 과학자들의 전망에

따라 전 세계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함. 이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2019년 UN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¹⁾을 이루어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자는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화되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앞다투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임을 선언하였음.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의 오명을 쓴 중국조차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나서는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음.
- 우리 정부 역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범정부 추진 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 대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가 되었음. 탄소중립은 크게는 세계와 국가, 작게는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정책 수립 및 집행, 결과에 대한 환류까지 이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1)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임.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도 역시 충남형 그린뉴딜 계획²⁾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상황임.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산업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도내 주요 산업구조를 변혁해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것이 요구되나,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탄소중심 일자리 축소에 따른 인구·지방세 수입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우리도는 이러한 피해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저탄소 사회로 연착륙할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 우리도는 제철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 고탄소 배출 시설이 밀집한 탓에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이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³⁾.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적 노력 및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을 역으로 활용해, 현재의 위기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신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도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역량을 결집해 이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의 혁신 추진을 선도하고 각종 정책을 도민과 함께할 실천 정책으로

2) 107개 과제, 31조 4,561억원, 일자리 238,219개 창출, 온실가스 177백만톤 감축 목표

3) 정부보다 1년 앞서 탄소중립 선언(2019), 동아시아 최초 기후비상상황 선포(2019), 탈석탄동맹 가입(2018), 대한민국 탈석탄 금고 주도, 노후화력발전소 2기 조기폐쇄 및 매년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이끄는 역할을 할 추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 현재 탄소중립 관련 업무는 도정 전반에 걸쳐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으며, 도의회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만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에,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매개로 하여 충남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추진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순연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행정의 기본적 기능을 밑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의회의 역할인 정책 방향 제시 및 우선순위 선정, 재정투자의 효율성 사전 검증 기능 등을 덧붙여, 이를 한데 모아 엮어내 우리도의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의회와 집행부 및 도민 참여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시대적 목표 완수를 통해 충남도의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건인코자 함.

3. 소관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4. 직무범위

-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및 방향 모색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발굴
-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공감대 형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 1296호
------	---------

제의연월일 : 2021. 9. 13.

제 의 : 의 장

○ 위 원 수 : 9인

○ 임 기 : 선임일 ~ 2022. 6. 30.

소 속	위 원 명	비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안 장 현	아산4(더불어민주당)
	방 한 일	예산1(국민의힘)
	이 선 영	비 례(정의당)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오 인 환	논산1(더불어민주당)
	한 영 신	천안2(더불어민주당)
농 수 산 해 양 위 원 회	김 기 서	부여1(더불어민주당)
	윤 철 상	천안5(더불어민주당)
안 전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최 훈	공주2(더불어민주당)
교 육 위 원 회	양 금 봉	서천2(더불어민주당)

※ 위원회 별(기경위 3, 복환위 2, 농수배위 2, 안전소위 1, 교육위 1)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 1306호
------	---------

제의연월일 : 2021. 10. 6.

제 의 : 의 장

소 속	위 원 명	비 고
복 지 환 경 위 원 회	김 한 태	보령1(더불어민주당)
	황 영 란	비 례(더불어민주당)

※ 기존) 9인 → 변경) 11인(기정 3, 복환 4, 농해 2, 안건 1, 교육 1)

Ⅲ 주요 활동

1. 활동결과 총괄

간담회	전체회의	현장활동	입법활동	도정질문	언론기고
1회	3회	1회	2회	1회	2회

2. 분야별 활동내역

1) 간담회(1회)

-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간담회
 - 때 · 곳 : 2021. 11. 1.(월) 14:00~14:40 /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실
 - 참 석 : (도의회) 김기서 위원장 · 황영란 부위원장 · 오인환 의원 등
(집행부) 기획조정실장 · 미래산업국장 · 기후환경국장 등
 - 주요내용 : 상견례 및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협의

2) 전체회의(3회)

- 제1차 회의(제332회 임시회)
 - 때 · 곳 : 2021. 10. 8.(금) 10:30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2차 회의(제333회 정례회)
 - 때 · 곳 : 2021. 11. 23.(화) 14:00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제3차 회의(제335회 임시회)

- 때 · 곳 : 2022. 3. 23.(수) 14:00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현장활동(1회) :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과 연계

○ 일 시 : 2021. 12. 8.(수)

○ 장 소 : 보령발전본부(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현장)

○ 참 석 : 18명(복환위 의원 7, 전문위원실 9 등)

○ 방문목적

-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현장 및 탈석탄·에너지 전환 사업 확인

⇒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영란, 위원 오인환·김한태·한영신 참석)

4) 입법활동(2회)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 제333회 정례회)

○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안장현 의원 대표발의 / 제335회 임시회)

5) 도정질문(1회)

○ 제목 : 탄소중립 정책에 관하여

○ 회기 및 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 11. 25.)

○ 질문자 : 오인환 의원

○ 답변자 : 행정부지사 이필영

6) 언론기고(2회)

- 필환경시대를 맞이하며 (오인환 의원)
(충청투데이 2021. 11. 5.)
- 탄소중립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이제는 노동전환 지원이다! (안장현 의원)
(충청투데이 2022. 2. 28.)

3. 세부 활동내용

1) 간담회 개최

I 개요

- 때 · 곳 : 2021. 11. 1.(월) 14:00~14:40 /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실
- 참석 : (도의회) 김기서 위원장 · 황영란 부위원장 · 오인환 의원 등
(집행부) 기획조정실장 · 미래산업국장 · 기후환경국장 등
- 주요내용 : 상견례 및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협의
※참석자 주요 발언 : 「붙임1」 참고

II 개최결과

※실·국장과의 간담회 후 위원 간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임

- 탄소중립 관련 분야 중 취약 및 중점 관리 대상을 선별하여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특위 방향을 정함
예) 농업분야 및 소외산업·근로자 보호 등에 중점
→ 경제실, 농림축산국 포함한 5개 실·국으로 특위 소관 확대
(5개 실·국 : 기획조정실·경제실·미래산업국·농림축산국·기후환경국)
- 5개 실·국 업무 분야 외 논의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이 관련 실·국장에게 전달하여 업무 추진
예) 특위 회의에서 녹색 건축 조성과 관련된 제안이 나올 경우 건설교통국장에게 해당 내용 전달 및 추진
- 실·국별 업무보고 준비는 탄소중립위원회 분과별 임무와 연계
- 보고 후 특위에서 도출된 의견을 분과위에 반영토록 실·국별 노력 당부

III 행정사항

- 특위 소관 5개 실·국 : 제2차 회의* 시 탄소중립 분과별 임무 관련 업무보고 준비
※붙임2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조직도 및 분과위 역할(기후환경정책과-11779, 2021. 10. 20.)」 참고
*2050 탄소중립 제2차 회의 : 2021. 11. 23.(화) 14:00, 복환위 회의실 / 안건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김기서 위원장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관련 대응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됨. 경제실에서 알아야 할 부분임.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관련 적극 대응이 어려움. 또한 위기 극복이 어려운 업종 및 소상공인 등이 존재하므로 경제실을 특위 소관 부서에 포함해야 함.
-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문제 발생 여지를 줄이는 길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적극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탄소중립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음이 심히 우려됨. 농업 분야에서도 할 것이 많으므로 농림축산국 역시 특위 소관 부서에 포함하여야 함.

오인환 위원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충남이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 많음. 각 중앙부처는 시행령에 부처 소관 내용을 담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극적이어서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됨.
- 충남은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 등으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임. 시행령에 충남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아야 제대로 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특히 농업 및 에너지 전환 부문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봐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

- 기초실은 총괄 입장이므로 실·국에서 관련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 충남 탄소중립 내용이 대선 공약 과제로 국가 과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또한 전기자동차 폐전지 활용 등의 사업은 국비 추진 사업으로 아직 담지 못하였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태규 미래산업국장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행정에서 필요한 것을 왜 기금으로 주느냐’는 도의회 의견이 있어 도민을 대상으로 기금 사용처 제안을 수렴하고 있으며, 미진할 경우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임.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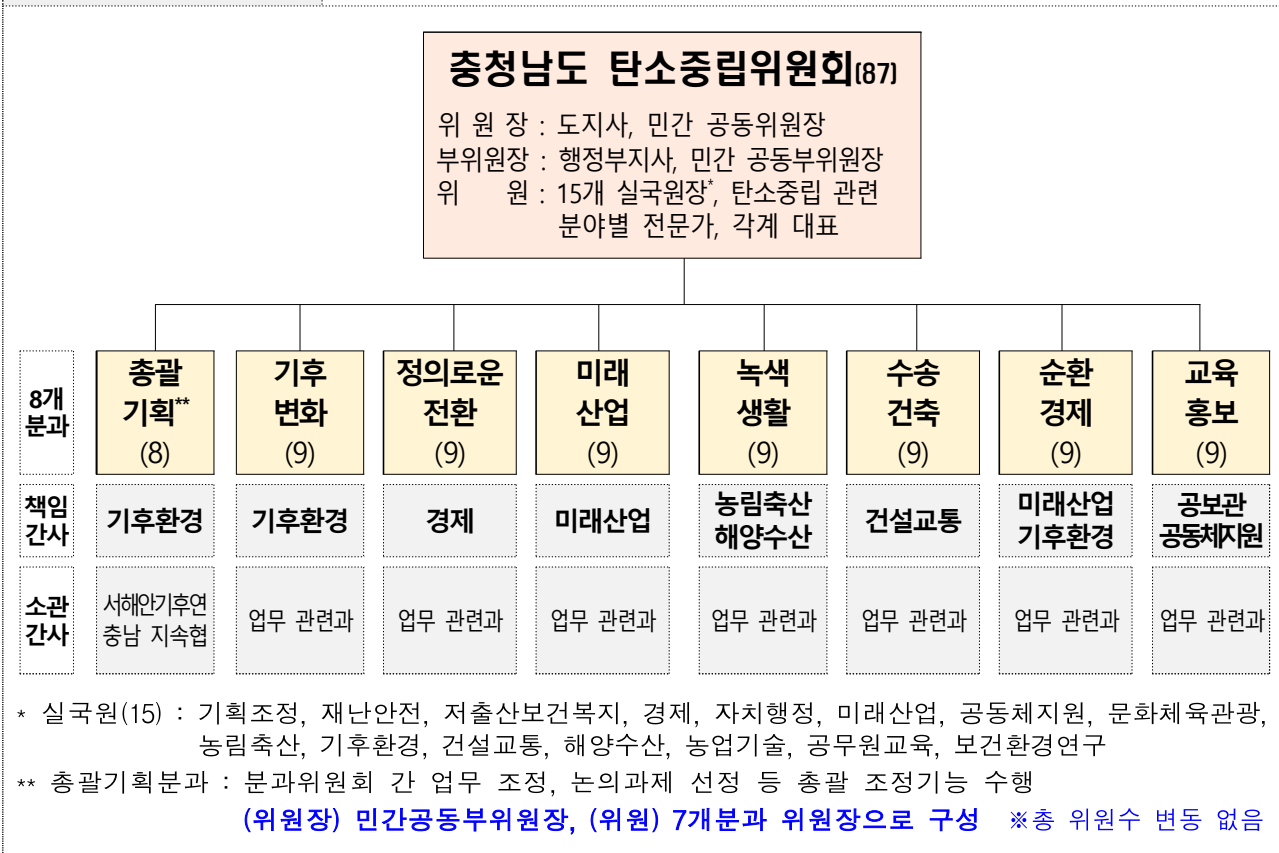
이남재 기후환경국장

- 충남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었음. 기초실은 총괄, 미래국은 발전소 관련, 큰 틀은 기후국에서 맡을 예정임. 성인지 예산에 준해 탄소인지예산제를 추진 중이며, 탄소중립담당관제 설치도 지사님께 건의한 상태임.
- (위원들이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거론하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산업계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대화를 나누겠음.

붙임2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조직도 및 분과위 역할

조직도



분과위	위원수	역 할	비 고
총 계	63	※ 민간 위촉직 / 위원장 포함 분과별 9명 이내로 구성	관련 실국
총괄기획분과	(8)	· [(구성) 위원장 : 민간 공동부위원장 / 위원 : 7개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 논의과제 선정 등 총괄 조정기능 수행	기후환경국
기후변화분과	9	·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발굴 및 사업 지원	기후환경국
정의로운전환분과	9	· 탄소중립 취약 산업 및 근로자 보호 등 경제산업구조 전환	경제실
미래산업분과	9	· 고탄소 산업 전환 및 저탄소 산업 육성, 온실가스 포집·활용, 수소 공급 등 재생에너지 보급	미래산업국
녹색생활분과	9	· 농축수산업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 생산기반 확충 도모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수송건축분과	9	· 친환경 교통·수송체계 구축 및 녹색 토지, 건축 조성	건설교통국
순환경제분과	9	·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 폐기물 자원화	미래산업국 기후환경국
교육홍보분과	9	· 탄소중립 관련 소통·교육·홍보, 캠페인 등 도민 참여 확대	공보관 공동체지원국

2) 전체회의 개최

(1) 제1차 회의(제332회 임시회)

○ 때 · 곳 : 2021. 10. 8.(금) 10:30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안 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결과) 위원장 김기서 의원, 부위원장 황영란 의원 선임

주요 발언



김기서 위원장(농수산해양위원회, 부여1)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였음.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시대적 목표를 완수하는 데 일조하여 충남도의 사회적·경제적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황영란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비례)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부위원

장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김기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
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에 김기서 의원 선출

⌘ 우명균 기자 | © 승인 2021.10.11 15:12



김기서 의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8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탄소중립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탄소중립특위는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및 방향 모색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발굴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대응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총 11명의 의원이 활동하며 활동 기간은 11대 의회가 끝나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다.

김기서 위원장은 “세계적 화두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배출량이 높은 도내 주요 산업구조를 변혁해야 하지만 탄소 중심 일자리 축소에 따른 인구·지방세 수입 감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이 겪게 될 피해와 충격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최소화해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제2차 회의(제333회 정례회)

- 때 · 곳 : 2021. 11. 23.(화) 14:00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가. 기획조정실 소관 (별도 보고 없이 총평으로 같음)
 - 나. 경제실 소관
 - 다. 미래산업국 소관
 - 라. 농림축산국 소관
 - 마.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 발언



김기서 위원장(농수산해양위원회, 부여1)

우리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되었으며,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추진과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최근 구성된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에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코자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음. 위원님들의 의지와 노력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장현 위원(기획경제위원회, 아산4)

탄소중립위원회의 계획이 산업체의 분야와 교통 분야의 배출

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수출도 그리고 일자리도 없을 것임. 그런 차원에서 넷제로까지 가는 연도별 계획들이 명확하게 그리고 산업 분야와 민간 부분을 포함한 계획들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할 것임.

또한 인권영향평가처럼 탄소영향평가 제도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추후라도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선영 위원(기획경제위원회, 비례)

기후환경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음. 감축 계획에 관한 타임 테이블 작성이 민간 부분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임.

서산민항 문제로 앞으로 발생될 탄소에 따른 추가 감소 대책이 더 있어야 할 것임. 서산민항이 건설되면 민항을 운영하는 동안 추가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추가 감축 예정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이남재 기후환경국장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9월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넷제로에 대해 어떠한 방향과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학계, 전문가 또 모든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충청남도형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임.

현재 탄소 전국 배출량 중 민간 공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임. 서산민항이 2026년 정도에 개항된다 해도 정기선 운항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며, 부정기선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운항한다면 서산공항 탄소 배출은 극소량일 것으로 사료됨. 향후 공항 개항 시 탄소배출량과 저감 대책에 대해 서산공항 문제를 탄소 2050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음.



이선영 위원(기획경제위원회, 비례)

부정기선 운항은 적자 운영을 예상한 것일 뿐, 흑자 운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 감축계획을 세워야 함. 적자 운영을 예상하고 탄소 감축계획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함.

김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운항 내내 배출되는 총 탄소량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내선 운항중 발생하는 탄소량은 이착륙 탄소배출량만 통계로 잡고 있는 상황임.

충남에서 배출한 탄소가 충남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므로 전 지구적으로 비행기가 몇 km를 운항하는 데 얼마의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계산하여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정부가 발표한 민간공항 탄소배출량 전국 배출량 대비 비율이 0.6%가 정말 제대로 된 통계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기후위기는 한 지역, 한 국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봐야 하며, 감축목표도 몇 배 더 예상해서 살펴봐야 할 것임.

이남재 기후환경국장

서산공항 배출량과 도민들이 청주공항을 개인 소유 승용차로 이용했을 때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어떤 것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겠음.



이선영 위원(기획경제위원회, 비례)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비행기의 탑승자를 n 분의 1로 나눴을 때의 1인당 배출량과 동승자 없이 한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 시 배출량을 비교하면 비행기가 1인당 200배 더 많이 탄소를 배출한다고 함.

이남재 기후환경국장

이러한 부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시민 사회단체·전문가·학계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 충남이 가장 선도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선영 위원(기획경제위원회, 비례)

산업기계, 농기계 부문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
임.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현재 사용되는 농기계들은 경유, 등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향후 농기계 도입 시 전기·수소 쪽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음. 농기계 분야도 식량·원예 분야와 연계해서 검토할 계
획임.

이태규 미래산업국장

산업 분야에서는 현재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면
서 업종 전환을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철강, 화학 분야도
수소 생산 쪽으로 부품 기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음. 이와 발
맞추어 농기계, 산업기계 분야도 포함하여 점차 개선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음.



오인환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논산1)

탄소중립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가는 2030년
에 2018년 대비 40% 감축량을 목표로 하고 있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 그
림이 그려지지 못하고 있음.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도의 나

머지 부서에서는 논의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우려스러움.

이창규 기획조정실장

탄소중립은 충남도정의 핵심 목표 및 가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남도 모든 부서가 마땅히 이에 동조하여 전체 목표에 따라 부서 단위별로 탄소중립 시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임. 이러한 이행 및 점검체계는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할 것이며,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므로 탄소중립위원회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도입될 예정임.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평가할 때 앞으로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과 당연히 결부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평가될 것임.



오인환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논산1)

탄소 배출과 관련해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관세를 조정할 움직임도 있고 아예 통상 자체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생산품에 대해서는 거절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음.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들을 예

로 들면, 자력으로 RE100을 선언하고 추진한다거나 탄소발자국을 최소화시키면서 제품을 생산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음.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

기업과 관련해 ‘ESG’ 라는, 환경·사회적 가치·거버넌스와 관련된 개념이 이슈화되고 있음. 내년도에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인식개선 교육 그리고 실제 기업 현장의 진단을 통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필요 시설 개선, 공정 개선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특히 수출 기업들에게 ESG는 상당히 큰 규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위주로 시범 추진할 계획임. 향후 산업부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임. 경제실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충남도의 특색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음.



오인환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논산1)

중소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기업들 각자가 보유한 생산기반, 인력, 자원들을 가지고 기존의 방식보다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일 것임.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부만 적극적인 상황이고 나머지 부서는 그에 발맞추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기업들 정도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자구책을

마련할 형편조차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움. 충남도 행정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특구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에 따른 기금도 조성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림.

이태규 미래산업국장

노후 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된 보령 같은 경우 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임. 정부에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다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 지역에 우선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음.



오인환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논산1)

중앙정부가 알아서 특구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구 지정을 요구하는 현황과 내용들을 갖춰서 충남도의 자구책까지 포함해 특구를 신청해야 할 것임. 특구 지정 시기와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대처해야 할 것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미세먼지의 영향은 발전소 인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에 달하고 있음. 오히려 인근 지역은 오염이나 피해 정도가 적고, 원거리 지역이 더욱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음. 특구를 지정

하거나 기금 사용 시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성인지예산이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는 정책들 또한 성과목표 설정, 이행계획 점검 등을 거치고 있으나 실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임. 탄소 감축 문제만 큼은 경제적인 효과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보는 과제이므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들을 잘 점검하고 진행해야 할 것임.



김한태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보령1)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현재 2025년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10억 원이 조성됨. 기금에는 발전사, 시군, 도의 분담비율이 있음. 발전사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를 법적 수명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폐쇄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마당에 기금까지 조성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도나 시군도 지역 자원시설세가 줄어들어 부담이 되는 상황임. 이에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임.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되기 전에 이런 기금이 조성되어 실직훈련, 구직비용 등에 사용했어야 했으나 사후에 이루어짐.

이태규 미래산업국장

올해 첫 보령 지역에 기금을 활용하여 해상풍력 기초조사, 수 소산업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사업을 시작하였음.



김한태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보령1)

보령은 어쩔 수 없이 1·2호기를 조기에 폐쇄했지만 향후 추가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되어 있음. 다른 폐쇄가 예상되는 지역에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대비를 하는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 기금에 국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므로 국비 확보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임.

최근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TV에서도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함. 국가과제가 아니라 지구적 어젠다가 돼서 큰 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 시민들은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TV는 홍보매개체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역할 등의 홍보가 필요할 것임.



황영란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비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 산림순환경영 모델 마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산림청에서 탄소중립 2050을 발표했는데 언론에서 상당한 질타가 있었음. 이에 산림청에서 환경단체라든지 각 산림단체들로부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향후 수정된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음. 수정계획이 나오면 실행계획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임.

식량·원예 분야에서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음. 축산 쪽도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라든지 축산분뇨 가스가 상당히 많음. 농업축산분야에서 배출량은 줄이고 산림 부분은 흡수량을 더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황영란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비례)

조사료의 가축 활용은 잘 되어가는지 설명이 필요함.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잘 되고 있음. 가축들이 먹이를 먹을 때 우수한 사료를 먹어야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됨. 그러한 차원에서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김기서 위원장(농수산해양위원회, 부여1)

2018년도 탄소배출 기준 에너지 전환 부분과 산업 분야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허나 산업 분야 2030년도 감축 목표는

14.5%임. 충남 중소기업들의 탄소 배출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ESG 경영 실태조사 결과만 존재함. 기업에 관련 담당자가 없다는 기업이 76% 같은 통계 수치만 존재하며 기업별 탄소배출량 정보는 파악되지 않음. 내년에 도에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임.



김기서 위원장(농수산해양위원회, 부여1)

산업과 관련된 충격 최소화가 필요함. ‘축산 대농가 메탄가스 감소, 벼농사 대농가 탄소 배출량 감소’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해당 주체들에게 충격을 주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 준비를 중앙에서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임.

충청남도에 있는 도시 중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는 것도 탄소중립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창규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시책 그다음에 정책 기준들이 각 실국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 역할

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임. 탄소중립 선도과제들이 대선공약 및 더 나아가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 진행 중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같이 탄소중립이나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업들은 내년도 국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후까지 노력해 나갈 것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범 적용을 하고 있음.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개정이 되면 아마 전 자치단체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도에서는 미리 환경부·행안부 등과 협의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입하겠음.

[제2차 회의]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 자료

[1]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인식 확산 및 홍보 노력
 - ESG 경영 관련 조례 발의, 유관기관과 협업, 교육 및 세미나 실시
-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ESG 역량 강화
 - 진단 및 도출된 진단내용의 맞춤형 컨설팅 진행
- ESG 경영 우수기업에 기업인대상 등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지원사업 ESG 평가지표 반영, 가산점 제공, 우수기업 포상 등

앞으로

- ESG 경영 유관기관 협업 통한 체계화된 교육 기회 부여
- 지원사업에 ESG 평가지표 반영하여 자발적 전환 유도

[2]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에 따른 중장기 일자리 사업 추진

- 화력발전소 단계별 폐쇄 및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 인력양성, 고용서비스(알선, 장려금 지급), 친환경분야 유망기업 지원
- 도-4개시(보령, 아산, 서산, 당진)가 컨소시엄을 구성,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5년간 5,530명 고용창출 계획
 - ※ 사업규모 : 5년간 409억원(국 327, 도 25, 시 57) / 21년 : 82억원(국 66, 도 5, 시 11)

그동안 추진실적

- 도-4개시(보령·아산·서산·당진) 간 컨소시엄 구성, 과제 제안서 마련 : '20. 8.~'21. 1.
 - ↳ 에너지·자동차부품산업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일자리사업 중점·육성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최종선정 : '21. 4.
- 고용노동부-도-4개시 간 업무협약 체결 : '21. 4. ~ 5.
- 고선패 출범 워크숍 및 착수보고회 개최 : '21. 6.
- 고용안정 선제대응 추진단 구성 및 사업 추진중 : '21. 8.~

앞으로

- 1차년도 성과분석을 통한 차년도 사업 재구성 등 계획 수립

[3] 소상공인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ESG가치 실천 소상공인 육성
 - 친환경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ESG가치를 실천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전용 특례보증(가칭: 녹색보증) 신설·우대보증 지원
 -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캠페인*에 동참하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우대보증을 통한 친환경 경영기업 육성
 - ※ 제로웨이스트(Zero-Waste) :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
- 충남형 뉴딜(디지털·그린) 실천 소상공인 중점 지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기적 녹색인증*기업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전용상품 신설하여 충남형 뉴딜산업 활성화
 - ※ 녹색인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총괄)에 신청, 접수·발급

앞으로

- 소상공인의 ESG경영 인식제고와 실천기업 육성 지원
- 탄소중립 적극 대응을 위한 충남형 뉴딜 중점 지원

[4]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산업단지 개선

- 정부는 국내 제조업의 중심인 산업단지의 제조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일자리위원회, '19.11.)'을 발표
 - 착공 후 20년 이상 노후거점산단(1개소) 및 연계산단(2~3개소) 중심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부처별 사업예산 '패키지' 지원
 - (추진목표) 제조혁신, 일자리·신산업 창출, 정주여건개선, 탄소중립 실현 등
-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
 - (비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허브 구축」
 - (대상산단) 천안제3, 인주,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강소연구특구
 - (주력산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주력) + 디스플레이, 반도체(연계)

· 용역개요 : 기간 '21. 4. ~ '22. 4.(12개월) / 사업비 245백만원(도비)

앞으로

-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및 공모 참여
 - 기업수요조사, 세부사업 발굴, 전문가 자문 통한 사업계획 고도화

[제2차 회의]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 ◇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현황 보고

□ 보령시 세수 보전

-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지(17개월)에 따른 보령시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道특별회계 예산 편성('22-'23 본예산)-1,634백만원
 - 2022년 본예산 : 1,156 백만원/ - 2023년 본예산 : 478백만원

□ 지역산업 체질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 유치

- 자동차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2021 ~ 2025년)
 - (사업비) 270억원(국비 84, 지방 169, 민자 17)
 - (사업내용)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연구 기반 및 시험 평가 인증 인프라 구축
-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사업 예타반영 추진 (2023 ~ 2026년)
 - (사업비) 3,470억원(국비 1,260, 지방비 970, 민자 1,240)
 - (사업내용) 석탄발전,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에너지전환에 따라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의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 (제안사업) 냉매물류단지, 배터리재사용 등 9개 사업

□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 운용

- (근 거)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운용규모) 100억 원 [도 30, 시·군 40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발전3사 30]
- (기간) 2021년 ~ 2025년(5년간, 필요시 연장)
- (용 도) 에너지 전환 대상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 지역영향분석,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 사업, 기업유치, 주민복지 사업 등

앞으로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대응
 - 정의로운 전환특구 우선지정, 정의로운 전환기금 확대 등
-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 발굴 지속

[제2차 회의] 농림축산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1 2050 탄소중립 농림축산분야 추진현황

□ 국내·외 동향 및 현황

- (2050 탄소중립) 기후위기 심화 및 저탄소경제 확산에 따른 영국 EU 등 주요국에 이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2.)
- (농업 온실가스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18년)은 727.6백만톤으로 그 중 농업분야는 전체의 3.4% 수준인 24.7백만톤 배출
 - 경종 47.8%(11.8백만톤), 축산 38.0%(9.4백만톤), 에너지 14.2%(9.4백만톤)

농업분야	합계	비에너지					에너지
		소계	경종		축산		
			벼재배	농경지 토양	장내발효	가축분뇨	
배출량(백만톤)	24.7	21.2	6.3	5.5	4.5	4.9	3.5
비 중(%)	100	85.8	25.5	22.3	18.2	19.8	14.2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환경부) >

- (탄소 흡수원)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5백만톤('18년)으로, 국가배출량(727.6백만톤)의 6.3%를 상쇄하는 핵심 탄소흡수원임
 - (감축 목표량) '18년 24.7백만톤 대비 37.7% 감축하여 2050년 15.4백만톤 배출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림축산 분야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농업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정책이 요구

2 저탄소·환경친화적 농림축산업으로의 전환

① 환경농업 생산·유통 기반 마련

-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탄소 발생 억제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벼농사에서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추진
- 탄소중립 및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선정(부여군, 7월), 기본설계비(3억원)
 - 농업생태환경 유지·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 ※ 유기농업자재(670ha, 6.7억), 친환경농자재(1,662ha, 21억), 친환경농업 지구조성(1개소, 7.2억원) 등

앞으로

- ◇ 환경농업으로의 생산·유통기반마련으로 온실가스 감축추진
- ◇ 농기계 연료의 전기·수소로의 전환, 고효율 에너지 설비 확대 추진

② 자원순환형 축산관리시스템 구축

- 미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깨끗한 축산농장 추가 지정(57개소), 마을형 공동퇴비장 설치(1개소),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시설 추진(2개소)
-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 조사료 재배 전문단지(4개소, 1,085ha) 조성을 통한 양질 조사료 생산
 -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메탄)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열이나 전기, 수소)으로 활용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21년 3개소)

앞으로

- ◇ 스마트 기술 활용(약취, 질병 등)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1→3개소)
- ◇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3→8개소)
- ◇ 축산약취 및 온실가스 저감사료 보급 확대 추진
 - 조단백질 상한치 조정 : 18→16%, 분 배설량 : 두당 0.87→0.85kg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산림순환경영 모델 마련

- (탄소중립) 적극적인 산림경영 등 흡수량 향상을 위한 선제적인 전략 마련
 - 탄소흡수능력이 우수한 수종의 경제림*(소나무, 백합나무, 편백 등) 육성 및 생태계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밀원숲** 확대 조성
 - * 경제림 : 15,536ha 조성('20~'25년, 6년간)
 - ** 밀원숲 : 2,579ha 조성('18~'22년, 5년간)
 - ※ '충남형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무 추진단 구성·운영('21.9.13.)
 - ↳ 1차 회의('21.10.18) : 추진전략 구상안 마련 논의 및 정책분야별 동향, 관련 법령 등 상위(법정)계획을 고려한 추진전략 구상안 준비 탄력적 대응

앞으로

- ◇ 임도망 구축 및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촉진
- ◇ 미세먼지차단숲 등 생활권 주변 도시숲 저변 확대('28년 264개소)

4 친환경 생산·가공·유통기반 마련 및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완성

- (집중화 단지조성) 유기농서비스자원단지판매 체험 생태 가공시설와 광역먹거리 센터농산물 유통시설 연계 설치를 통해 공공 학교급식에 대한 공적영역 확대
 - (단기) 소비자가 친환경농업을 경험·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 (장기) 작부체계 확립 및 적정가격 책정으로 친환경농산물 품목 확대
- (먹거리 선순환) 학교급식에 친환경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여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농·어가 소득 증대

앞으로

- ◇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21년 34.7% → '30년 50% 목표)
- ◇ 인접 대도시(세종·대전)의 공공기관 중심으로 로컬푸드 공급 광역형모델 구축

[제2차 회의]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1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및 우리 도 대응 현황

[1] 국외 동향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글래스고 기후합의' 채택('21.10.31. ~ 11.13.)
 -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적응기금 2019년 대비 2025년까지 2배 확대 등

[2] 정부 동향

- 국가 2050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21.5.)
-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등 탄소중립 추진 기반 마련('21.8.)
-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발표(COP26/'21.11.)
 - (NDC상향)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 (시나리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 시나리오 2안(A,B) 마련

※ 시나리오는 다양한 미래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2안(A,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님

[3] 우리 도 대응

- 전국 최초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공론화,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가입 및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선언 주도
 - 지방정부 최초,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17.~'21.)
 - 전국 최초 언더2연합 가입('18.9.),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18.10.)
 - 「기후 비상상황」 선포, 전국 최초 탈석탄 선언 및 금고 지정('19.10.)
 -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 개최('20.5.), UN 기후정상회의 초청 연설('20.9.)
 - P4G 서울 정상회의 주간 탄소중립 특별세션 우수정책 사례 발표('21.5.)
 - COP26 참석, 충남도 탈석탄·탄소중립 정책 공유 및 국제 네트워크 강화('21.11.)
- 국가 계획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 탄소중립 정책 추진
 -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착수('21.8.~)
 -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비전·전략 초안 발표('21.9.)

※ (비전)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충남 / (목표) 2018년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 감축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21.10.~)

2

충청남도 탄소중립 주요 정책 추진 성과

[1] 전국 최초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선언 및 전국 확산

- 충청남도, 전국 최초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지정('19.10.23.)
 -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 철회 및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
 - 道 금고선정 평가 항목에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 지표 반영
-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등 70개 기관 동참 증으로,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 도입 지속 건의 中

그동안 추진실적

- ◆ 전국 56개 기관이 참여한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선언식 개최('20.9.)
- ◆ 금고 선언식 이후 서울·인천·광주 등 14개 지자체 추가 참여(56→70개 기관)
- ◆ 5대 금융그룹 포함 전국 113개 금융기관 「기후금융 지지선언」 결과 도출('21.3.)
- ◆ P4G 서울 정상회의 주간 탄소중립 특별세션 사례발표 및 금고 정책 동참 요청('21.5.)
- ◆ 행안부('21.6.), 교육부('21.7.)에 금고지정 기준(예규) 개정 지속 건의 中
- ◆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정책'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1급 포상 수상('21.11.)

[2]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탈석탄·탄소중립 정책 선도

- 기후대응 국제기구 가입·활동을 통한 탈석탄 정책 추진동력 확보
 - 언더2연합('18.9.), 탈석탄 동맹('18.10.) 가입을 통한 국제 모범사례 정책 공유
 - 탈석탄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통해 '노후 석탄화력(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및 동아시아 최초 '기후비상상황 선포'('19.10.) 등 정책 선도
 - 언더2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장 선출('20.12.), 지역 네트워크 강화 활동 전개
 - COP26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세계 각국 탄소중립 목표 공유('21.11.)
- 탈석탄·기후위기 대응 관심 촉구 및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 의지 표명,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탈석탄·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17.~)
 - 지방정부 주도의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정, 범세계적 환경운동 주도

그동안 추진실적

- ◆ ('17) 전국 최초 국제 컨퍼런스 개최,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공론화 도모
- ◆ ('18)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공동 선언
- ◆ ('19)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 「기후 비상상황」 선포 및 탄소중립 최초 선언
- ◆ ('20)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공표
- ◆ ('21)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비전·전략 발표, 탈석탄 동맹 가입 대정부 건의

[3]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道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전 의견 수렴
 - (의견수렴) 충남 미래포럼(3.12), BH-국민참여 지역간담회(4.22), 충남녹색성장포럼(6.8) 등
 - (실천선언) 시장·군수(3.29), 道여성단체협의회(4.14),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4.21) 등
 - (착수보고) 2021년 충남 탈석탄·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I)과 연계 추진(9.9)
- 국가 계획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예정(~'22 상)
 - 국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한 부문별, 지역별, 연도별 감축로드맵 수립
 - ※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비전·전략' 초안 발표('21.9.8. 국제컨퍼런스, 지사님)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 이상 감축

연구용역 개요	
◆ 기 간 : '21. 8. ~ '22. 6.(10개월)	◆ 예 산 액 : 180백만원(국 90, 도 90)
◆ 수 행 :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내 용 : 탄소중립 비전·목표 및 전략 도출, 부문별·연도별·지역별 감축로드맵 수립 등	

[4]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운영

-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道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 전문가·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위촉위원 70명 참여(당연직 17명)
 - 道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 심의·의결, 이행사항 등 점검 추진
- 충청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자문 등 분과별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탄소중립 분과위원회 운영(제1차 회의 '21.10.13.~14.)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출범식 전 분과위원회 先 개최, 활동 개시
 - ※ 8개 분과 : 총괄기획, 기후변화, 정의로운 전환, 미래산업, 녹색생활, 수송건축, 순환경제, 교육홍보
- 실질적인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정부-도-시군 간 상호 공유, 피드백 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 강화 계획
 - ※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표준(안) 마련 등 중앙정부 지원 예정('22.~, 환경부)

배너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
	- '21.12.20.(월) 오전10시 / 스플라스 리솜 / 위촉장 수여 등
	▶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22. 상반기)
	- 道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비전·전략 완성

충남도의회 2050탄소중립특위,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 이용환 기자 | ☎ 승인 2021.11.25 00:42

2차 회의 개최 통해 기후환경국 등 3개 실·국 주요업무 청취...지역특색 반영된 환경정책 추진
산업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서산민항 탄소 대응 등 주문



충남도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2050탄소중립특위)'는 지난 23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기서(초선, 부여1) 위원장은 “2030년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 중 에너지 분야와 산업분야가 굉장히 미비하다”면서 “대기업은 충분히 스스로 진행할 능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인환(초선, 논산1) 의원은 “2050탄소중립은 환경 관련 부서만 책임지고 이행할 사업이 아니라 도내 모든 실·국의 과제라”면서 “기후환경국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공직자가 연계돼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영란(초선, 비례) 의원은 “산림 숲 조성과 관련해 벌목이 병행된다면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연구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태(초선, 보령1) 의원은 “저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뿐만이 아닌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일자리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이선영(초선, 비례)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의 명확한 타임 테이블이 계획돼야 한다”면서 “또한 서산 민항의 운영과 관련해 탄소의 추가발생량의 명확한 분석과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 제3차 회의(제335회 임시회)

- 때 · 곳 : 2022. 3. 23.(수) 14:00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가. 기획조정실 소관 (별도 보고 없이 총평으로 같음)
 - 나. 경제실 소관
 - 다. 미래산업국 소관
 - 라. 농림축산국 소관
 - 마.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 발언



오인환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논산1)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보령·당진 지역에 배전·송전선로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자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김영관 정책기획관

서울대 주한규 교수가 경향신문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임. 공식적 의견은 파악되지 않고 있음.



오인환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논산1)

우리 지역의 도민들은 화력발전소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겪어왔으며,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피해 보상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므로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주장했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는 과정임.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에 관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될 소지까지 이를 수 있는 구체적 제안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움. 사전 차단은 물론, 만약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더 구체화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혹은 도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 내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수도권의 도심 한복판에라도 세우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지, 지속적·반복적으로 도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양금봉 위원(교육위원회, 서천2)

서울대 주한규 교수가 충남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집어서 “당진 등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건설할 수 있다” 발언은 한 개인의 입장만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여겨짐.

에너지 정책들이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수도권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임. 에너지 부분에서만큼은 수도권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충남도민들이 더 이상 희생을 해서는 안 될 것임. 이러한 발언이 나온 맥락, 배경이

무엇이든 사전에 불씨를 꺼야할 것임. 충남도의 입장을 반드시 내세워서 불씨를 꺼야지, 그냥 지나가는 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김영관 정책기획관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직 인수위 측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구축, 송전선로 주변 지역 공정 보상체계 마련 같은 과제들에 대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김영명 경제실장

모든 사업은 주민과 함께해야 잘 추진될 것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행정은 위험할 것임.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유재룡 미래산업국장

SMR의 가장 큰 장점이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보다는 내륙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최근의 추세는 전력 소비 지역 인근에 설치하는 것임. 주민의 안전성, 수용성, 입지 적정성 등 다각적 논리를 만들어서 적극 방어토록 하겠음.

임승범 농림축산국장

주민들과의 협의·합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봄. 공론화

는 안 됐지만 사전에 도의회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으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운영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행동하는 방안 또는 지속가능협의회와 같이 행동하는 방안들을 고려하여 대응토록 하겠음.



양금봉 위원(교육위원회, 서천2)

업무보고에 그치지 말고 향후 5개 실국이 모여 공통과제 3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 부분을 함께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안장현 위원(기획경제위원회, 아산4)

충남은 2045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산업 분야는 4,400만 톤이었던 것을 2045년도에 1300만 톤으로 줄여야 되는데, 민간 분야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임. 민간과의 로드맵은 합의된 바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현재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각 분과 위원들과 시나리오를 구

축 중에 있음. 아직 이해당사자들과 합의하거나 소통된 결과는 아님. 일단 골격을 만들어서 곧 나올 예정인바,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음.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중간보고회에 시나리오 안이 나온 바 있으며, 지사님의 ‘2045 넷제로 조기 실현’ 발표에 맞춰 각종 줄여야 할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중임.



안장현 위원(기획경제위원회, 아산4)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의견이 조율된 것이 아닌, 시나리오를 만들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임. 합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을 재검토하여 현장과 합의되는 넷제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인식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기후놀이터)은 필요할 것임. 기후위기·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민이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범사업의 양과 폭을 더 늘려야 할 것임.

농림축산국의 농촌 마을 단위 RE100 사업을 에너지과를 비롯한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잘 추진하여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함.

김한규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일원이 아니라고는 해도

안일하게 좌시하면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명확하게 우리도와 도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황영란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비례)

농업 관련 충남도의 배출량 감축 계획서를 보면 실제로 가축 사육 개체 수를 줄이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은 없음. 분노 처리 등의 개선만 있을 뿐임.

사료의 개선, 도민 교육과 홍보를 통한 개체 수 줄이기 등 향후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임승범 농림축산국장

개체 수를 줄이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축종별 적정 사육 두수라는 것이 있음. 축사 사육 면적당 사육 두수 기준 강화 건의를 진행하려고 농림식품부와 협의 중임.

사료의 단백질 감축을 통해 돼지의 경우 일반 성축 기준 하루에 2~3kg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음. 금년 6월 이전까지 사료 내의 단백질 함량을 3% 이내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임.



황영란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비례)

또한 임업과 관련해 벌목 문제 등을 조례,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임.



이선영 위원(기획경제위원회, 비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SMR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분과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남에 도입하는 내용이 아닌 탄소중립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이 있으니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임.



이선영 위원(기획경제위원회, 비례)

SMR은 아직 연구 단계에 불과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개발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다가 안전성이라는 게 입증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하는 논의는 시기상조임. 근본적으로 원자력에너지라는 것이 과연 재생에너지·그린에너지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임. 환경을 우려하는 많은 단체들의 입장도 원자력은 결코 안전

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임.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탄소중립위원회가 7개 분과가 있는데 아이디어 도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봄. 주민 수용성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이선영 위원(기획경제위원회, 비례)

여러 차례 언급이 되면 오히려 그 방향을 가지고 ‘도입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점점 순회하게 될 수도 있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연구 발표 자료를 검토하면서 도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임.

그리고 농림축산국에서 마을 자립형 에너지를 구축하면서 RE100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힘. 미래산업국에서도 해당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국내 전력 소비는 대부분 산업 전력에서 발생하는데 산업계에서 왜 재생에너지 전환을 준비하지 않는지 의문임. 신규 산업단지에라도 재생에너지단지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산업단지 내에서도 분명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지역 농촌에 있는 축산단지에는 다 태양광 패널이 올라가 있는데 산업단지 공장 지붕은 모두 비어있음. 산업단지에서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음.

유재룡 미래산업국장

기업의 재산권 행사의 문제와 관련됨. 20년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기업을 팔거나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문제가 되어 기업들이 원하지 않음. 또한 충남에 재생에너지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진출하려 하나 진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협의체를 만들고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 달라 당부를 하고 있음.

김영명 경제실장

전력산업단지가 경제적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소비, 생산에 대한 게 내재화되지 않으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단계지만 정부와 소유권 문제 등을 잘 협의해서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선영 위원(기획경제위원회, 비례)

탄소국경조정 등 산업계에서 이러한 환경적 측면에 대비해야 국제사회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작하는 과정에서 농기구들이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음. 해당 농기구들에 대한 에너지 전환 노력이 있는지, 충남에 없더라도 타 시도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예를 들자면 수소나

전기를 이용한 농기구를 개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임승범 농림축산국장

아직은 미진한 상태임. 농촌에서 쉽게 탈 수 있는 사륜차의 경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반 농기구에는 아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선영 위원(기획경제위원회, 비례)

농업계에서도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서 다행스러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구 분야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재고할 만한 여지가 있음. 농기구 분야 에너지 전환에 대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영란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비례)

보령, 태안 해상에 대량 풍력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해양 생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농촌지역 농가들의 경우 거리상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태양광 발전 보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유재룡 미래산업국장

제주도에는 해안 주변에 풍력단지가 있어 오해를 불러옴. 해

상풍력은 풍력의 양이 일정하도록 약 30km, 40km 바깥으로 나가 설치됨. 상당히 소음도 많아 주민들한테 문제가 됨.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주민피해가 크지 않을 것임.

어업 관련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업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태양광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20년을 유지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것임. 한 8년, 9년 정도에 고장나면 본인들이 비용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크게 장려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임.



김기서 위원장(농수산해양위원회, 부여1)

충남이 1억 6,000만 톤이나 배출하는 불명예스러운, 전국 시도 중에 1위임.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전 분야를 다 해야 되는데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하고 이 수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될 것임.

건물·수송·농축산물·폐기물·흡수원 이런 부분은 집중하기 쉽지 않으므로 비산업 분야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관련 집행부서에서 현황판을 만들어 집중력 있게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함.

정확한 숫자에 대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근거 데이터가 나와 줘야 하며, 이를 통해 하루에, 1년에 얼마큼 온실가스가 감축

되는지에 대한 목표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임.

또한 흡수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함. 감축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회하는 게 흡수원이므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직접적인 방법보다 흡수원을 유지시키고 증대시키는 간접적 방법이 더 나을수도 있을 것임.

김영관 정책기획관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에서 전 실국이 전사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음.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공약부터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실국이 함께 협조해 나가고 대응토록 할 것임.

[제3차 회의]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 자료

[1]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추진

-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1.12.30.)
- 2022년 ESG 관련예산 신규 반영(경제진흥원 등 4개기관 252.5백만원)
 - * 경제진흥원 170백만원, 3개 상공회의소 82.5백만원(충남북부 50, 서산 12.5, 당진 20)
-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 * 충남경제진흥원, 3개(충남 북부, 서산, 당진) 상공회의소와 ESG 확산을 위한 협의 추진

앞으로

- ESG경영 진단 및 교육 등 중소기업 확산 여건 마련
 - ESG경영 진단·컨설팅, 교육·세미나, 설비개선 지원 등
- ESG경영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자발적 전환 유도

[2]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에 따른 중장기 일자리 사업 추진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으로 화력발전소 단계별 폐쇄와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 고용서비스, 장려금 지원, 교육훈련, 기업지원 등을 통한 고용 창출
 - ※ '21년 실적 : 고용창출 969명, 교육훈련 179명, 기업지원 229개사, 장려금 322명 지원
- 1차년도 사업계획 수정·보완을 통한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정책대상 발굴지원단 운영 및 이전직 인식개선 등 신규사업 발굴

그동안 추진실적

- 도-4개시(보령·아산·서산·당진) 간 컨소시엄 구성, 과제 제안서 마련 : '20. 8.~'21. 1.
 - ↳ 에너지·자동차부품 산업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일자리사업 중점·육성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 '21. 4.
- 고용노동부-도-4개시 간 업무협약 체결 : '21. 4. ~ 5.
- 고용안정 선제대응 추진단 구성 및 1차년도 사업 추진 : '21. 8.~12.
- 2차년도 사업계획서 고용노동부 제출 및 한국고용정보원 컨설팅 대응 : '22. 1.~3.

앞으로

- 고용노동부 2차년도 사업계획 컨설팅 대응 및 사업 추진

[3]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산업단지 개선

- (공모개요) 정부는 국내 제조업의 중심인 산업단지의 제조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일자리위원회, '19.11.)'을 발표
 - (사업대상) 착공 후 20년 이상 노후거점산단(1개소) 및 연계산단(2~3개소) 중심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부처별 사업예산 '패키지' 지원
 - (추진목표) 제조혁신, 일자리·신산업 창출, 정주여건개선, 탄소중립 실현 등
- (추진현황)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
 - (비 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허브 구축」
 - (대상산단) [거점]천안제3 + [연계]인주, 아산테크노밸리, 강소연구특구
 - (주력산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주력) + 디스플레이, 반도체(연계)

· 용역개요 : 기간 '21. 4. ~ '22. 4.(12개월) / 사업비 245백만원(도비)

앞으로

- 정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선정 목표('22.04. 선정 예정)
 - 기업수요조사, 세부사업 발굴, 전문가 자문 통한 사업계획 고도화

[4] 해외로 나아가는 충남의 탄소중립정책과 국제사회와의 연대

-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친환경 전기버스·충전소 보급 프로젝트
 - 정부의 그린뉴딜과 道 탄소중립·신남방정책과 연계, 서자바주 스마트시티(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전기버스 보급 및 충전소* 설치
 - *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ESS(에너지저장장치) 충전소 구축
 - 도내기업 참여와 신기술(폐배터리 활용 ESS)에 대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수요에 대한 진출 교두보 마련



- '언더2연합' 및 '탈석탄동맹' 등 道에서 주도·추진하는 국제 기구 활동과 국제회의(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원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강화 및 협력 공감대 형성 추진

앞으로

- 외교부 2023년도 정부 ODA 사업 선정·심사 대응(상반기)
- 서자바주 사업부지 현장답사 및 사업추진(4분기)

정의로운 전환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대응

-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의 재정 지원과 경제 활력 회복 추진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 (운용기간) 2021 ~ 2025(5년간)
- (규모) 100억원(도30, 시군40, 발전사30)
- (기금용도) 에너지 전환 지역 고용안정·일자리 사업, 지역영향 분석, 주민복지 사업, 기업유치 등

< 그동안 추진현황 >

-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협약('21.6.)
 - 도 + 시군(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 발전사(중부, 서부, 동서발전)
- 1차년도 기금 조성(10억원) 및 사업 추진('21.7.)
 -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 어업피해 용역(180백만원, '21.8~'22.12.)
 - 수소산업클러스트 육성 기본계획 용역(75백만원, '21.8~'22.12.)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 도민제안('21.11.~'21.12.)
 - 12개 사업 제안되었으나, 기금 용도에 부적합
- 도·시·군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 발굴 회의('22.3.14.)
 - 에너지 전환에 따른 기반 조성 등 기금 용도 확대 필요(조례 개정)
- 독일 지방정부 초청 영상간담회 개최('22.3.23.)
 - 독일 정의로운 전환 체계와 기금 운용 모범사례

**앞
이
로**

-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금 사업 발굴 지속
- 국가 차원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또는 기후대응기금 우선 배분 건의로 우리도 기금 확대 추진

□ 탈석탄 지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 요구

-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 신설 및 특별지역 지정 건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충남도에 우선 설립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전환을 위한 모델 연구
-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산·학·연·민·관 간 주체별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기능 수행
- 재직자 및 퇴직자 대상 재취업·전직 등을 위한 교육훈련·취업지원
- 국가 및 지자체의 정의로운 전환 사업 위탁 추진

**앞
이
로**

-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25.)에 따른 지정 요건 등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등 동향 파악 및 대응

[2]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체질 전환

- ◇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및 지역사업 체질 전환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견인

- 대단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2020~2025 / 4.2GW, 23.4조원)
 - 보령(2GW/10.2조원), 태안(1.8GW/11.3조원), 당진(0.4GW/1.9조원)
 - 보령시 해상풍력 단지 공모 선정('20. 9. / 3년간 국비 36억 지원)
 - 당진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20. 11. / 04.GW)
 - 태안군 해상풍력 단지 공모 선정 ('21.5. / 3년간 국비 22억 지원)

- 친환경 블루수소 생산플랜트 구축(2022~2025)
 - 보령발전본부 유희부지 내 수소 25만톤 생산 규모 단지 구축(5조원)
 - * '21.11.26. 도-보령시-SK E&S-중부발전 업무 협약

**앞
이
로**

- '25년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
- '22년 상반기 중 인허가 완료 및 블루수소 생산플랜트 착공(7월)

□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사업 예타 반영추진 (2023~2026)

- (사 업 비) 7,343억원(국비 2,100, 지방비 930, 민자 4,313)
- (사업내용) 석탄화력발전 폐지 등 에너지전환에 따라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의 산업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지원
- (제안사업) 냉매물류단지, 배터리 재사용 등 9개 사업
- (추진성과) 산업부 예타 용역보고서에 제안사업(9개) 반영('21.11월) 및 '22년도 정부예산 반영(3개 사업, 34억원)

**앞
이
로**

- 지역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22. 4. 14.)
-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 예타사업 조기추진 건의
- '22년도 정부예산 반영 3개 사업 공모 선정 대응

□ 충남형 미래자동차 전환 종합지원플랫폼(2022~계속)

- (사 업 비) 4,356.8억원
- (사업내용)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구축, 미래차 전환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판로·인력·기술 등 21개 사업
 - ※ 매년 자동차부품 기업에 3,200억원 규모의 융자추천과 이자보전 지원
- (사업수행)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센터), 15개 지원협의체 기관
- (추진성과) '22년 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사업 선정(산업부, 90백만원)

- 미래차 전환 사업대상 및 지원협의체 대상기관 추가 발굴
-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마련, 지원 과제 선정위원회 구성
- 산업부 시범사업 협약체결('22.4.) → 착수('22.5.)
- 2030년까지 200개 기업을 미래차 전환 기업으로 육성

[제3차 회의] 농림축산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1 2050 탄소중립 농림축산분야 국내동향 및 현황

□ 국내동향 및 현황

- (추진경과) 탄소중립 선언('20.12.), 2030 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등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21.10.)
 - 농축수산 분야는 2030 감축목표를 18백만톤('18년 대비 $\Delta 21.6\%$ → $\Delta 27.1\%$)으로 상향하고, '50년까지는 15.4백만톤 제시($\Delta 37.7\%$)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농업계, 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확정·발표('21.12.)
- (발생량) 농업분야(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18년 기준)은 21.2백만톤으로 전체 배출량(727.6백만톤)의 2.9%* 차지
 - * 농업분야 비중 : ('90) 7.4% → ('00) 4.2 → ('10) 3.4 → ('15) 3.0 → ('18) 2.9
 - 배출원별로 경종부문 11.8백만톤(47.8%), 축산부문 9.4백만톤(38.0%), 시설원예·농업기계, 선박 등 에너지부문에서 3.5백만톤(14.2%) 발생

배출량(계) (백만톤, CO ₂ eq)	비에너지						에너지 (농축수산)
	소계	경 종		소계	축 산		
		벼재배	농경지 토양		장내발효	분뇨처리	
24.7	11.8	6.3	5.5	9.4	4.5	4.9	3.5 (수산 2.5포함)
비 중(%)	47.8	25.5	22.3	38.0	18.2	19.8	14.2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환경부) >

- (추진전략)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
 - ICT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밀농업을 확산하고 환경친화농업, 생태농업 등을 통해 고투입 농법을 저투입 농법으로 전환
 -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이고 저메탄사료 등 저탄소 사양관리
 - 농촌공간계획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전환 추진
 - 농식품 유통거리 단축과 식생활 개선 및 대체식품 확대

⇒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온실가스 배출저감, 화학에너지 사용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2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1 자원순환형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 (저탄소 농업) 화학비료 저감, 논물 관리 방식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배출 저감
 - 생산농업에서 환경에 대한 ‘가치’ 농업으로 전환,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경영비 절감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농업 육성
 - ※ 유기농·친환경 농자재 등 지원(2,800ha),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3개소) 등
- (고효율 설비보급)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으로(70ha, 57억원) 온실가스 감축(2.2천톤), 신재생에너지(지열·공기열)난방시설 보급(4.3ha, 16억원) 확대
-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농촌마을단위 에너지 자립모델인 RE100 실증사업 추진
 - 마을발전소,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 (저탄소 농법 보급) 경운 최소화 등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법 등록 확대
 - 무경운 등 방법론 확립 및 기존 관행농법 대비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앞으로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온실가스 감축
- 마을자립형 에너지 시설구축(2개소)으로 RE100 실증 선도모델 마련

2 분뇨처리 개선 및 가축 사양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분뇨처리 개선) 공동자원화·공동퇴비장(각 1개소) 지원, 악취저감시설(64개소) 확대, 분뇨처리방식 전환(퇴·액비화 → 에너지화 및 바이오차 생산*)
 - * 우분, 계분은 고체연료(발전소 등과 연계) 및 바이오차(토양개량제)로 이용하고 돈분뇨는 바이오가스 회수를 통해 열원(난방, 전력 등) 활용
- (사양관리) 악취저감대책 추진, 사료 조단백질 함량 감축 및 적정 사육밀도 유지
 - 악취분무시설, 바이오 커튼·필터, 탈취탑 등 설치지원, 양돈사료 내 단백질 감축(최대 3%↓)으로 배설량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극대화
- (바이오 에너지화) 농촌지역의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농축부산물 등) 활용한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생산시설 유치추진(전국 1개소 선정)

- 기존 운영중인 공동자원화시설(15개)에 바이오차, 에너지화시설 연계
- 제철소 등과 연계하여 축분을 활용 고체연료 생산시설 시범 추진

3] 선도적인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마련

- (탄소중립)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연계한 ‘충남형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선도적 마련 및 체계적 이행
 - 산림은 충남의 49.1%(404천ha)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의 탄소흡수원 강화 및 보존 방향 등의 중심으로 추진 주력
 - 산림분야별(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 등 구체화
 - ※ 충남형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무 추진단” 구성·운영(‘21.9.13.)
 - 실무추진단 킷오프(‘21.10) 및 정책방향과 전략마련(2차) 회의(‘22.2)
 - ※ 산림탄소 흡수능력 강화 등 5대 정책방향 및 14개 핵심과제 선정
- (흡수원 강화) 산림순환경영 구축 및 도시숲 조성·유휴토지 나무심기 확대
 - 산림의 영급구조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미래수종 식재로 흡수능력 강화, 도시숲 조성·나무심기 확대와 남북·해외 산림협력 통한 흡수원 확충
- (흡수원 보전) 산림생태계 복원·산림훼손 감소 및 산림재해 예방
 - 단절된 산림복원 및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적극적 예방으로 흡수원 보전

- 도 중장기(‘19~’28) 산림정책과 연계 ‘2050 충남형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 전략 마련(‘22.5), 정책 본격 추진

4]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 (집중화 단지조성) 유기농지원단지(판매, 체험, 가공 등)와 광역 먹거리센터(유통) 연계 설치를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공적영역 확대
 - 식생활 교육, 가족단위 체험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를 집중 홍보
- (광역브랜드 홍보) 친환경 농산물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 홍보 및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22.8, 코엑스) 등 참가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 (식재료 안전)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 (푸드 플랜) 지역내 생산·소비하는 먹거리 순환체계 확산을 통해 유통거리 축소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대

앞으로

- ◊ 유기농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체험·판매와 광역먹거리센터의 농산물 수급·유통기능을 강화하여 시너지 극대화
- ◊ 로컬푸드 등 직거래 확대, 온라인 농산물유통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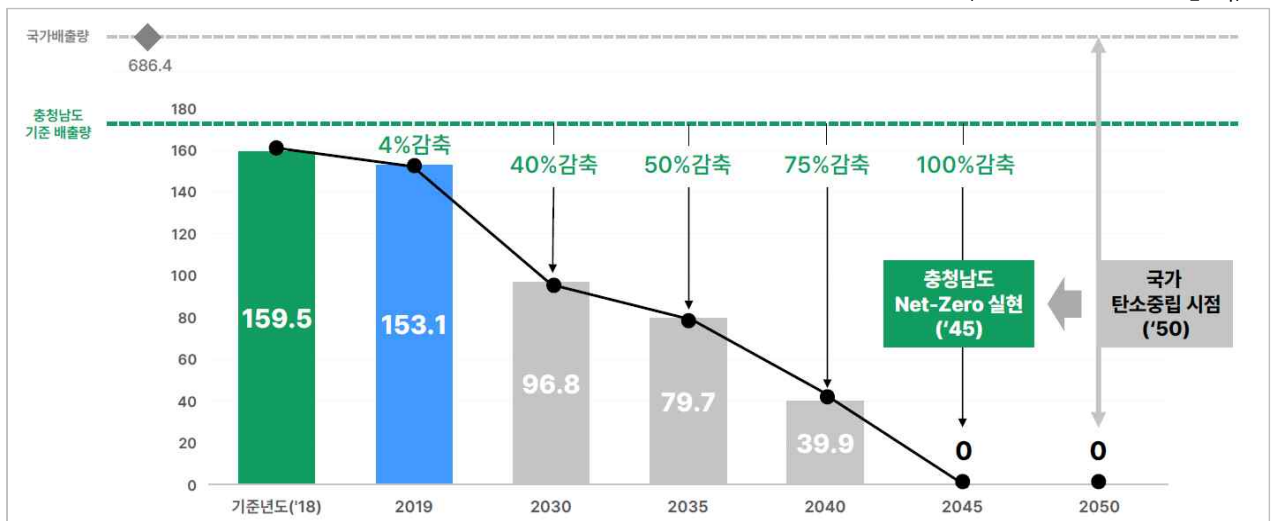
[제3차 회의]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안)

❖ 2035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으로 2045 충청남도 탄소중립 실현

□ 道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단위: 백만톤CO₂eq)



□ 부문별 감축 시나리오

(단위: 백만톤CO₂eq)

부문별	2018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계	159.5	96.8	79.7	39.9	0
전환	102.5	57.0	44.6	15.7	0
산업	44.3	37.9	36.1	32.0	13.3
건물	2.3	1.6	1.3	0.9	0.3
수송	6.1	3.8	3.2	1.7	0.2
농축산물	3.5	2.7	2.4	1.8	1.8
폐기물	2.0	1.0	0.8	0.2	0.2
흡수원	-1.8	-8.7	-10.5	-14.9	-15.8

1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 추진기반 마련

【1】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탄소중립 비전·목표 및 전략 도출, 부문·연도·지역별 감축로드맵 수립
※ (기간) '21.8월~'22.6월 / (사업비) 180백만원(국90, 도90) / (수행)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 (추진사항)

-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21.9.) 및 중간보고회('21.12.) 개최
- 도 탄소중립 비전·전략 발표 (※'18년 대비 '35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 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설계 (※'45년까지 도내 탄소 순배출량 '0')

○ (향후계획)

- 탄소중립 관련 도민 인식조사 실시(3월)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4월)
-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군, 분야별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5월)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6월)
-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및 이행방안 마련·추진(7월)

【2】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본격 운영

- ❖ (구성) 8개 분과* 87명(당연직 17, 위촉직 70)
* 총괄기획, 기후변화, 정의로운 전환, 미래산업, 녹색생활, 수송건축, 순환경제, 교육홍보

○ (추진사항)

- 2022년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및 과제발굴 계획 수립(1월)
- 부문별 대표과제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별 개최(분과별 2~3회)
- 대표과제 선정 및 연구 수행(3월~4월 / 7개 분과) ※ 총괄분과 제외

○ (향후계획)

-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4월), 탄소중립 기본계획 반영(6월)

【3】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건의

❖ 충남 소재 석탄화력발전(전국 59기 중 29기 소재) 폐지·중단 등 탈석탄 정책 가속화를 통한 대한민국 탄소중립 조기 실현

※ (충남도 시나리오) 2045년 온실가스 도내 순배출량 '0' 달성

- 전환부문 : 2045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 29기 전부 폐지·중단

○ (건의내용)

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남 소재 석탄화력발전 추가폐지 반영

- 제9차 기본계획 상('20~'34) 충남 소재 14기 폐지 계획(전국 30기)

⇒ 제10차 기본계획('22~'36) 내 충남 소재 **3기 추가폐지** 반영 건의

②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조기폐지 지원방안 마련 등

- 가동 후 30년 도래 석탄화력발전 원칙적 폐지 및 성능개선 사업 전면 중단

○ (추진사항)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도정 핵심정책 과제로 선정(3월)

○ (향후계획)

- 대통령직 인수위, 환경부, 산업부, 국가 탄중위 등 지속 방문 건의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부) 및 국가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환경부) 등

【4】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신청

❖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탄소중립 특화 선도모델 발굴·시행 지원

- 탄소중립기반구축, 탄소중립사회전환프로그램, 탄소중립연계사업 추진 등

※ (기간) '22.~'26.(5년간) / (선정) 2개소 / (사업비) 개소별 400억(국 240, 지 160)

○ (추진사항)

- 공모사업 희망 시군 접수 및 신청대상지 평가·선정(2개소/천안·당진)

※ 4개 시(천안, 보령, 당진, 논산)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2022. 2. 9)

-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 신청 지자체 컨설팅을 통해 제안서 보완

※ 1차 컨설팅 : 1. 28.(수), 2차 컨설팅 : 3. 10.(목)

○ (향후계획)

- 사업제안서 보완 제출(환경부, 3.31.까지) 및 평가선정 대응

※ (일정) 제안서 접수(3월말) → 서면평가(4월초) → 현장실사(4월중) → 발표평가 및 선정(4월말)

2 국내외 탄소중립 리더십 확보 및 정책 확산

【1】 언더2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탄소중립 확산 지속 견인

- (추진방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조속한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 선거 재출마
 - 언더2연합 공동의장 활동 종료('20. 12. ~ '22. 6. 30.)에 따라 재출마 추진
- (향후계획) 의견피력 및 선거 대응(3월) → 후보등록(4월) → 후보자이의제기 접수(5~6월) → 지역 공동의장 확정 통보(6. 30.)

【2】 2022 탈석탄 기후위기 선제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추진방향) 아태지역 탈석탄 확산을 위해 탈석탄 동맹과 협력 개최
 - ※ (2021년) 언더2연합 아태지역 포럼 개최, 탈석탄 동맹 가입 대정부 건의 추진 등
- (추진사항) 자문회의 개최(2. 17.) 및 도-탈석탄 동맹 개최방안 협의(3. 11.)
- (향후계획) 탈석탄 동맹 협업과제 논의(4월, 세션·인사초청 등) → 자문회의 개최(5월) → 기본계획 수립(5월) →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9월)

【3】 제3차 충청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 (추진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7대 부문별·부서별 전략 및 행동계획 마련
 - ※ (제3차 계획) '22~'26년(5년단위 법정계획), 7개 부문 22개 추진전략 101개 사업(27개 부서)
 - (7대 부문) 물관리, 농수산, 국토·연안, 건강, 생태계, 산업·에너지, 적응 주류화
- (추진사항) 부서별 의견수렴(1~2월) 및 환경부 등 세부시행계획 협의(3월)
- (향후계획) 제3차 세부시행계획 수립(3월 말) → 적응사업 이행·평가(4~12월)

【4】 기후변화 인식 개선을 위한 기후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 (추진방향)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대전기상청 소속) 조성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안내 및 학습공간 조성, 친환경 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 ※ 사업개요 : (기간) '23.3~12월, (위치) 내포신도시내, (사업비) 300백만원
- (추진사항) 센터 및 기후놀이터 공사일정 및 운영방안 협의(3월)
 - ※ 센터 외부체험시설 및 기후놀이터의 시설 연계를 위해 지속 협의 추진
- (향후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추진(3월), 준공(12월)
 - ※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23.5월)에 맞춰 '23.2분기 중 기후놀이터 운영 추진

3 환경교육도시에 걸맞는 탄소중립 환경교육 선도적 추진

1 도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본격 추진

❖ 건물의 건설단계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탄소중립 구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육을 통해 도민 탄소중립 실천 유도

※ (사업개요) 칠갑산 휴양랜드, '21~'23년, 198억원(국비99, 도비99)

- (추진내용) 탄소중립연수원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제작설치 용역 추진
※ (설계방향) 신축건물 30%를 목구조 공간으로 조성하여 탄소중립 개선방안을 시도하고, 에너지자립률 100% 달성으로 탄소제로 건축물 인증
※ (BALT, Building As a Learning Tool) 건물자체를 탄소중립 교육장으로 활용
- (추진사항) 공유재산 심의('21.7월), 투자심사('21.8월), 공공건축 심의('21.11월), 현황측량('22.2월), 설계지침서 마련('22.3월) 등 행정절차 이행
- (향후계획) 건축설계 공모(3월), 건축사 선정(5월), 기본·실시설계 착수(6월)

2 도민 탄소중립 환경교육 콘텐츠 제공 확대

1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11개소 → 15개소)

- (추진방향)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등 환경교육 시행을 위한 시군 센터 확대
- (향후계획) 지정계획 수립(5월), 심사위원회 구성·평가(6월), 센터 지정(7월)

2 '충남형 탄소중립 환경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120백만원)

- (추진방향)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도내 초·중·고 학교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에 환경교육 교재 보급
- (향후계획) 사업공모 및 선정(4월), 사업 착수(6월), 교재개발(11월), 보급(12월)

3 환경교육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개발(70백만원)

- (추진방향) 기후변화·탄소중립·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대한 주제로 쉽고 재밌게 영상 제작하여 공무원·도민 활용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 (향후계획) 사업공모 및 선정(4월), 사업 착수(6월), 콘텐츠 개발(12월)

충남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소형발전 설치 보도 적극 대응을”

강재규 기자 | 승인 2022.03.23 15:57

기후환경국장 등 5개 실·국장 참석하여 탄소중립 관련 추진 상황 보고



23일 충남도의회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농업경제신문 강재규 기자] 충남도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23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사업, 지역 영향 분석, 주민복지 사업, 기업 유치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해 보령·당진에 소형 원자력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러한 언론의 내용이 도정 실무에 반영되어선 안 될 것이며, 도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영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분노처리 개선 및 가축 사양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현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에 두고 나아가는 상황에서 민간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후놀이터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양과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소형 모듈 원전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세운다는 의견은 전혀 충남도민을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며 수도권 주민을 위한 충남의 희생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소형모듈원전은 아직 100% 완성형 기술이 아니라 판단되어 충남지역에 설치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또한 산업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타 분야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장방문 활동

※소관 상임위원 복지환경위원회 현장방문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음.

↳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영란, 위원 오인환·김한태·한영신 참석)

I 개요

- 일 시 : 2021. 12. 8.(수)
- 장 소 : 보령발전본부(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현장)
- 참 석 자 : 18명(복환위 의원 7, 전문위원실 9, 총무담당관실 1, 활동보조 1)
- 방문목적
 -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현장 및 탈석탄·에너지 전환 사업 확인

II 현장방문 총평

-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현장) 조기 폐쇄 현황을 파악하고, 폐쇄로 인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 체감하였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함.

②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현장

-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재
- ▶ 특징 :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는 국내 전력설비의 3.5%를 차지하는 대규모 발전단지로 유연탄 화력, LNG복합화력, 태양광, 소수력, 연료전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내용 】

①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경과

-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는 1983년 12월과 1984년 9월 각각 준공해 35년 이상 불을 밝히며 전기를 공급해 왔으며,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왔음.
- 2020년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석탄화력 감축’ 방향에 따라 노후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추진함.
- 충청남도도 석탄화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노후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함.(‘20. 12월)

② 당부사항

- 고용인력 감소 우려에 따른 대책 강구 필요
 -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이후 총 326명의 인력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 유지 및 타지역 진출인원 최소화를 위한 대책 필요
- 보령시 세수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보령 1·2호기 조기폐쇄(‘20.12.)로 당초 폐쇄시기(‘22.5.)보다 17개월이나 단축하여 조기폐쇄됨에 따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조기 폐쇄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 지역 산업 체질 전환을 위한 신규 사업 유치 및 특별 지원 지역 지정 노력 요구

③ 현장 사진



4) 입법 활동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조례 제정 활동임.

(1)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가. 제정이유

- 상위법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도의 책무를 규정함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안일 : 2021. 10. 22.

라. 의결일 : 2021. 12. 16. (제333회 정례회)

마. 시행일 : 2022. 3. 25.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는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 신성장 녹색산업의 육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탄소중립 이행) 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충청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도지사는 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과 제5항 제4호의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하 “민간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5항 제4호의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하 “민간공동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 교육청 교육국장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제5항 제1호 위원에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본다.

1.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위원장 및 민간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민간공동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등

3. 탄소중립 전략 수립·변경

4. 탄소중립 이행 등에 관련된 조례·계획·정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책임간사와 소관간사를 둘 수 있다.

1. 책임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국 주무과장

2. 소관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과장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충청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기준 적용

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법인·개인 등과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기준 마련

- 나. 제1호의 기준 준수 등 자발적 참여 유도
- 2.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노력
 - 가. 탄소순환시스템의 지속적 확충
 - 나. 수목·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기능 보전
 - 다.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대체 조림
- 3.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장려
 - 가.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 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 강구
- 4. 친환경운동의 권장
 - 가. 도민 실천운동의 전개
 - 나. 가목의 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 5. 교육 및 홍보
 - 가. 도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 대상으로 실시
 - 나.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강구
-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협력관계)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도지사는 도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차·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slow)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도지사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환경에 적응하기 용이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기업과 주민들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가 수립한 충청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또는 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안장현 의원 대표발의)

가. 제정이유

-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자 보호 문제에 사전 대응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 도지사의 책무 규정
-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노동전환 지원 사업내용 및 관련 지원 규정
- 충청남도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위탁 및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 규정
- 산업구조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다. 제안일 : 2022. 3. 3.

라. 의결일 : 2022. 3. 29. (제335회 임시회)

마. 시행일 : 2022. 4. 11.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산업·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및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와 지방정부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성별·연령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성별·연령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7조(노동전환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8.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노동자단체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노동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노동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의 기준과 대상 및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고용보협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충청남도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 및 이·전직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개편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
3.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4.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지원
5.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가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 ①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

전환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지역·직무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의 지정
4. 노동전환 지원정책,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업종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업종의 범위 및 조치방안
2. 노동전환 지원업종의 노동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노동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도정질문

- 제목 : 탄소중립 정책에 관하여
- 회기 및 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11-25)
- 질문자 : 오인환 위원
- 답변자 : 행정부지사 이필영



오인환 위원(복지환경위원회, 논산1)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언더2연합 총회에 참석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지를 세계만방에 보여 준 의미 깊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더2연합 총회 기조연설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더 멀리, 더 빨리,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지자체, 산업계, 대기업 등이 나서서 물밑 작업을 치열하게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석탄 화력, 석유화학, 제철 등 탄소 중심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 실행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에 시행령 등 법규에 우리도 상황에 맞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우리 도민들을 위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굳어져서 관철되어 제정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 도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점이 미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온몸으로 겪어 왔습니다. 이분들은 물적, 심적인 여유가 없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빠르게 실행한다면 함께 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분야, 소외되고 또는 배제되는 영역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경제 침체, 실업자 양산, 사회 불안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법규나 지침이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생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업종 전환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를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1,680여 개의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와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기차 시대의 도래에 따라 관련 연구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역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최소 2050년까지 도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 도의 탄소중립에 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조직적 변화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인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와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할 탄소중립담당관제도 신설 또는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진 조직을 발족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 되어서 12월 22일까지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첫째 탄소중립 도시 지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둘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녹색산업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전환 시 안정적 지원, 셋째 지역사회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도민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사업장이 위치한 보령·서천·태안·당진·서산 등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사업 전환과 관련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전환 특별지구 지정기간이 2년 이내,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행령 안에는 되어 있는데, 2034년까지 우리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 폐쇄 이후에도 나머지 15기 발전소

의 단계적 폐쇄가 205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특별지구 지정기간을 2050년까지 연장 또는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기후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지금 시행령 안으로써는 좀 없습니다. 따라서 기금 활용방안과 구체적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에 추가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실행 과정에서 소외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탄소중립 정책이 빠르게 실행되고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부족하다면 지역경제 침체, 실업자 양상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기업의 설비교체 비용과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과 금융, 세제 지원 등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친환경 보급에 따른

내연기관 정비업체 위기감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산업부의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육성 사업에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이 선정되어서 정비인력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고요, 미래차 전환을 위해 친환경차 분야와 자율차 분야에서 기반구축 및 기업육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탄소중립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컨설팅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인 도입 준비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고, 탄소중립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특례보증 제도를 신설하여 우대보증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난 9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 이상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할 별도의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보강 등에 대해서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전담조직이 신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언론기고 활동



HOME > 오피니언 > 시론

‘필(必)환경’ 시대를 맞이하며

충청투데이 | 승인 2021.11.05 | 19면

오인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최근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변화로 인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느낀다. 코로나가 기후변화의 산물임을 많은 이가 공감하고, 비대면의 일상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드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필(必)환경’ 개념이 사회의 주도적 트렌드로 자리잡는 추세다.



정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혜안’을 통해 ‘필환경’ 키워드 분석을 하면, ‘지속가능·재활용·ESG·소비자·녹색기업·지역사회·적극참여’와 함께 ‘탄소중립·기후변화’가 핵심을 차지한다. ‘필환경’이 환경에 대한 실천적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더 나아가 전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이 ‘필환경’의 연장선에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필환경’은 실천이 담보돼야 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필환경’의 실천적 모습은 ‘쓰레기 없는 삶’을 의미하는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쓰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등 개인의 작은 노력을 모아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다.

시민의 자발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기업의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인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같은 비재무적 분야에도 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개념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ESG 성과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하기에, ESG 경영지표가 부진하다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상품의 과대포장 지양 등과 같이 스스로 환경을 지킬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필환경’이 자리 잡기 위해 시민·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독려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관(官)의 역할 또한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분야별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87명으로 구성된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충남

도의회 또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들어갔다. 각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실천 로드맵을 만들며 탄소중립 추진을 지원하고 독려해 '필환경'시대의 주축으로 활동할 것이다.

'필환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작게는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 크게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철학이다. 민(民), 경(經), 관(官)이 손을 맞잡고 '필환경'시대를 맞이한다면 환경과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역시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백척간두에 선 절실한 자세로 '필환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때다.

탄소중립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이제는 노동전환 지원이다!

충청투데이 | 승인 2022.02.28 | 18면

안장현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한국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해 최빈국 국가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국제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국제원조를 지원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것이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불도저처럼 경제성장 한길만을 달려왔기에 가능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이 과정에서 환경이나 기후변화를 뒤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동안 무시했던 기후변화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탄소중립,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후 위기 극복정책 중 하나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36년 이상 충남과 수도권 등지에 전력을 공급해오던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가 2020년 12월 30일 폐쇄됐다.

그 결과 화력발전소가 폐쇄된 보령의 경우 인구 10만 명이 무너져 버렸다. 이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 상권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에 따르면, 현재 전국 화력발전소에 일하는 인원은 총 2만 2천여 명이다. 이중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1만여 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할 만큼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또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시 경우 2030년 기준 전기차 생산 비중이 45%를 넘어가게 되면 전체 고용인원의 30%가 직업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나 전기차 보급·확대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실업률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9기 중 절반인 29기가 자리 잡고 있고, 현대차 아산공장도 존재한다. 발전소나 공장의 폐쇄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경우 도민들의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일 것이다.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산업전환에 대비한 노동자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는 불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관련 사업을 수행해 가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지원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충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노동자 지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조례는 탄소중립과 산업 디지털 전환 등 관련 정책 수립 시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미리 준비돼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유비무환의 자세로 현재 닥친 문제를 받아들이고 신속히 대응한다면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참고] 특별위원회 활동 사진





결과보고서 작성 참 여 자 명 단

■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직 위	성 명	소속 위원회
위원장	김 기 서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황 영 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방 한 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안 장 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양 금 봉	교육위원회
위원	오 인 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윤 철 상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이 선 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최 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한 영 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김 한 태	복지환경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직 위	직 급	성 명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혜환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정운태
직원	지방행정주사	안병휘
직원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범희
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명호

■ 발행일 : 2022년 6월 8일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충남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

전화 041-635-5133 / Fax 041-635-5291